

이승만 대통령의 戰爭指導

전쟁지도

김행복

목 차

1. 서론
 2. 전쟁 초기 : 유엔군의 참전과 한국군작전지휘권 이양
 3. 전쟁 중기 : 휴전협상 전개와 미국과의 갈등
 4. 전쟁 종결기 : 휴전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 이 대통령의 전쟁지도에 대한 평가
 6. 결론
- * 영문 초록

1. 서론

전쟁지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전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가의 총력을 조직화하여 전승(戰勝) 획득에 집중시키는 지도(指導) 역량과 기술’¹⁾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군사사(軍事史)에서 전쟁지도의 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 1) 김광석. 1994. 「용병술어연구」, 서울 : 병학사, 508 ; 이 외에도 ‘국가의 전쟁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자원과

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전쟁 양상이 총력전(Total War)으로 변화된 20세기 초·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총력전 상황에서는 과거 단순한 무력전 중심의 전쟁과 달리 국가의 역량과 각 분야의 전력(戰力)을 집중적으로 관리·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되었는데, 이 같은 전략 환경 하에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려는 국가 행동 전반을 지도할 방법이 필요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지도'라는 용어는 아직 완전히 합의된 뜻으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은 듯한데, 이런 현상은 다수의 군사용어와 마찬가지로 외래어를 도입해 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구미(歐美)에서 통용되고 있는 'Conduct of War'를 '전쟁지도'라고 번역한다면, 이 말은 '전쟁을 지도하는 주체'와 '전쟁을 수행하는 객체'가 서로 분리될 수 있음을 은연중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전쟁수행'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지도'한다는 의미가 약하므로 전쟁지도라는 용어를 쓰는 편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전쟁지도의 주체도 전쟁에 참여하여 그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시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지도에 관한 인식과 능력, 그리고 전쟁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가? 이 문제는 아직까지 공개적·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 대체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로는 당시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전쟁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고,²⁾ 국군수뇌부에 전쟁지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노력을 조직화하고 효율화하는 일련의 조정 통제의 과정'(최병갑. 1991. "전쟁지도론", 「안전보장론」I, 국방대학원, 272 ;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1993.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방향」, 12~14), 또는 '전쟁의 억제 및 전쟁수행을 위해 모든 국력을 준비·계획·실시하는 국가적 방책과 기술의 총칭'(육군교육사령부. 1987. 「군사이론연구」, 138)으로도 정의되고 있다.

2) 우리나라가 자체의 안보를 주체적으로 지도해 나갈 체제를 갖춘 시기는 1962년 12월에 헌법 제181조로 안보회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964년 2월에 안보회의의 사무국이 기능을 발휘한 때부터이다.

한국전쟁에서 모든 전쟁지도는 미국과 유엔군지휘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한국 정부와 국군 지휘부의 역할은 지극히 미미하여 언급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또는 강대국 중심의 역사 해석의 산물이며, 전사 연구의 착시(錯視) 현상일 뿐'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한 후 '지휘권 통일(Unity of Command)'을 위해서 국군의 작전지휘권(作戰指揮權)³⁾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된 후에도 전쟁의 주체는 역시 한국 국민과 한국군이었고,⁴⁾ 국군 지도부는 여전히 존속하여 그 기능을 발휘했다. 물론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막강했으며, 유엔군 지휘부의 인적 자원들은 한국군의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했다.⁵⁾ 그렇다고는 해도 유엔군은 원정군으로서 지원부대였으며, 그 역할도 근본적으로 한국군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필자는 한국군 지휘부의 전쟁지도를 중요시하여 그 실상을 부각시키려고 시도해 왔던 바,⁶⁾ 본고에서는 국군통수권

3) 예하 부대의 구성, 과업의 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 달성에 필요한 권한 지시를 포함한 지휘 기능을 행사할 권한. 작전통제권과 동의어이지만 교체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김광석, 『用兵術語研究』, 427/428.

4) 전쟁 기간 중 한국군과 유엔군의 병력 규모는 대략 다음 표와 같다.

시 기	한국군	유엔군	계
1950.6.25	103,800	-	103,800
1950.9.1	91,700	87,600	179,300
1951.1 중순	224,000	199,000(178,000)	423,000
1951.7.1	273,000	281,000(253,000)	554,000
1953.7.27	599,900	341,600(302,500)	941,500

※ 유엔군 중에서 ()안의 숫자는 미군 병력

※ 출처 : 전사편찬위원회, 1986. 『한국전쟁요약』, 131~133.

5)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물론이고 워커(Walton H. Walker)·리지웨이(Matthew B. Ridgway)·밴플리트(James A. Van Fleet)·클라크(Mark W. Clark)·테일러(Maxell D. Taylor) 등은 이미 세계대전에서 그 능력을 검증받은 장군들이었으며, 우리 군의 지휘부는 그들과 비교되기 어려웠다.

자)7)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에 관해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려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가인 이 대통령은 군사적인 면에서의 경험과 능력이 전무(全無)한 상태였으며, 군사면에서 자신을 보좌할 인물이나 기구도 빈약했으므로 전쟁 초기부터 큰 난관에 봉착했다. 이론상 한 국가의 대통령은 모든 정보와 전황을 살펴서 최종적인 결심을 내리는 위치에 있으나 이 대통령에게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는 다만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조직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역량과 노력으로 전쟁에 대처하였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전쟁 과정 중에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 취했던 조치와 행동, 그것이 전쟁 전반에 미친 결과와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2. 전쟁 초기

: 유엔군의 참전과 한국군작전지휘권 이양

2.1 전쟁 발발과 작전지휘권 이양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군 남침'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8시경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때 그는 창경원 비원 연못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

6) 김행복. 1999. 『韓國戰爭의 戰爭指導』, 國防軍史研究所.

7) 국군조직법(1948.11.30)에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쟁지도에 있어서 최고·최종의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다.

8) 10시경이라는 설도 있다.

토록 하는 한편,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날 낮 12시경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서리 겸 국방부장관 신성모와 채병덕 육군총참모장¹⁰⁾의 보고는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 “적을 격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것이었다.¹¹⁾

그 때문인지 이 대통령은, “공비를 막으면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정도의 간단한 지시만을 하였다. 그 후로 이 대통령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 대한 기대와 의존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6일 새벽 3시경 동경에 있는 맥아더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¹²⁾ 다음날에도 전화를 걸었다.¹³⁾

전쟁 발발 초기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습을 당한 군 지도부와 정부가 허둥대고 있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할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군사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불행히도 그를 보좌할 전쟁지도 기구¹⁴⁾와 인물도 없었다. 국방부장관인 신성모는 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고, 3군의 총참모장들¹⁵⁾도 대동소이했다.

이런 약점을 알고 있던 이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군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 국난을 타개토록 지시하였으므로 다음날인 6월 26일 오전 10시에 「군원로회의」가 소집되었다.¹⁶⁾ 이 회의에서 신 장관과

9) 그는 일요일 아침 이곳에서 낚시질하는 습관이 있었다. 대통령비서 황규만의 증언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國事'를 구상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사. 1973. 「민족의 증언」, 서울 : 을유문화사, 18.

10) 현 육군총참모장의 당시 명칭.

11) 중앙일보사. 위의 책,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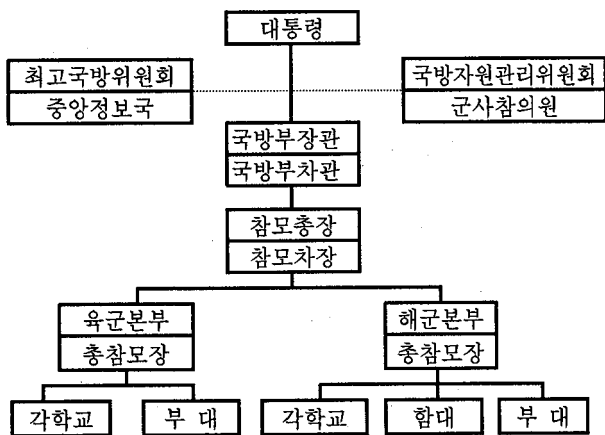
12) 고지마 노보루 지음, 김민성 옮김. 1981. 「한국전쟁」(상), 서울 : 종로서적, 41.

13) 밤중이었으므로 맥아더의 부관이 “사령관님이 주무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맥아더 원수가 깨면 이렇게 전하시오. 당신대들이 빨리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국인을 다 죽이겠소.”라고 말했다. 경무대비서 민복기의 증언.

14) <한국전쟁기의 국방기구>

채 총장이 설명한 요지는 ‘국군은 반격 중’, ‘전황은 유리하게 진전 중’이라는 것이었다. 군 원로들은 자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황 정보를 요구하면서, “결전 또는 저항선을 확정하라”든가 “전쟁지도 방침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나, 두 사람은 동일한 설명만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결국 군 원로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소집된 회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다.¹⁷⁾

정부는 여전히 긴박감에 싸여 있었다. 간혹 전달되는 전선의 상황은 긴급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으나, 정부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책을 결단할 최고책임자는 이 대통령이었으나, 그는 아무런 결심을 하지 못했다. 그에게 사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도, 어떤 방안 자체를 건의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 편성표 상에는 ‘최고국방위원회’, ‘중앙정보국’, ‘군사참의원’, ‘국방자원관리위원회’ 등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기구였다.

- 15) 육군총참모장은 채병덕 소장(35세), 해군총참모장은 손원일 준장(42세), 공군총참모장 김정열 준장(31세)은 모두 전쟁 경험이 일천하였다.
- 16) 현직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하 사람은 각군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김홍일 소장(육군참모학교장), 송호성 준장(청년방위대 고문단장)이었다. 예비역으로는 이범석(전 국방부장관), 유동열(전 통위부장), 이청천(전 한국광복군총사령관), 김석원(전 제1사단장) 등이었다.
- 17) 金碩源. 1977. 「老兵의 恨」, 서울 : 育法社, 280~283.

이다.

6월 26일 오후 의정부를 적에게 빼앗기고 창동이 위태롭게 되자 신 장관은 한밤중에 군 수뇌회의를 개최했다.¹⁸⁾ 이 자리에서는 전세의 불리함이 솔직하게 인정되었고, 미군의 지원이 없는 한 사태는 절망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후의 작전 방침이란 육군의 경우 '게릴라전', 해·공군은 육군과의 협동하여 정부 요인의 '망명·탈출'을 도울 수 있을 뿐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로 신 장관은 경무대를 방문하여 대통령에게 즉시 피신할 것을 건의하였다. 비서 고재봉에 의하면, 이때 이 대통령은 서울 사수를 고집하며 완강히 반대했으나, 장관의 간곡한 진언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설득에 의해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¹⁹⁾ 대통령의 서울 출발은 극비로 이루어졌고, 동행인(同行人)도 부인과 비서관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출발 직전에 워싱턴의 주미대사 장면에게 전화하여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 지원 요청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대통령 일행은 27일 새벽에 기차 편으로 용산역을 출발하여 남쪽으로 향했다. 일행이 대구에 이르자, 너무 조급히 서울을 떠난 것으로 생각했던지 이 대통령은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여 대구를 출발한 기차가 대전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서도 계속 북상(北上)할 것을 지시하자 수행원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일단 대전에 머무르며 전황을 살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패배의 모든 책임이 미국의 원조 약속 불이행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장면 대사에게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라고 재촉하였다. 이 시점에 대통령은 정부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상실한 상태였다. 절망적인 사태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그는 공

18) 참석자는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 공군총참모장 김정열 준장, 해군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 육군작전참모부장 김백일 대령.

19) 고지마 노보루, 「한국전쟁」(상), 57.

산군이 대전까지 내려오게 되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더 남쪽으로 도망쳐 경멸을 당하지는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다.²⁰⁾

이날, 즉 6월 27일 오후 이 대통령은 무초(John J. Muccio)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미국 지상군이 참전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에 고무된 그는 서울에 있는 육본 정훈국에 전화하여 “유엔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미국은 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무기와 군수물자를 공수 중에 있다.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이긴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는 내용의 담화를 녹음하였으며, 이 내용은 이날 밤 10시 KBS방송의 전파에 실렸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달랐다. 국민의 사기를 고무시킬 목적으로 실시한 담화였으나, 서울에 있지도 않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에게 말한 셈이 되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곧 방송을 중지했다.²¹⁾ 이 녹음 방송과 6월 28일 새벽의 한강교 폭파는 참담한 비극을 만들어 국민의 원성을 듣게 되었다. 대통령의 서울 탈출은 국가원수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여론이 비등했던 것은, 이 일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6월 30일 이 대통령은 정일권 소장을 육군총참모장 겸 3군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사태를 수습토록 하였다. 그러나 전황이 계속 악화되자 그는 7월 1일 대전에서 목포를 경유 배편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갔다가, 7월 9일에는 다시 북상하여 대구의 경북도지사 관사로 옮겼다.²²⁾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때, ‘전승을 향해서 매진’해야

20) 프란체스카 여사도 남편과 함께 죽겠다고 말했는데, 미 대사관측은 두 사람을 적극 만류했다. 이 사실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 일등서기관 노블(Harold Joyce Noble)은, ‘안전을 위해 도망치기보다 간악한 적의 무리에 대항하여 죽겠다는 마음은 이들 부부의 용기와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외국 특파원들이 대통령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달아난 것으로 추측하게 되었고, 뒷날 그에 대한 기사들은 이런 오해가 투영된 것들이라고 한다. 해럴드 노블 저, 박실 역. 1980. 「전화속의 대사관」, 서울 : 한성사, 125~126 ; 고지마 노보루. 위의 책, 63, 72.

21) 고지마 노보루, 앞의 책, 75.

할 최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렇게 전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²³⁾

이런 입장은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유엔회원국은 당연히 유엔군사령부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으나, 회원국이 아닌 한국의 군대는 통합작전 수행 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작전수행의 통합적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1950년 7월 14일 ‘한국에서 현재와 같은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맥아더 원수에게 보냈으며,²⁴⁾ 이 공한에 의해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7월 17일 워커 장군에게 한국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위임하였으므로, 한국군은 실제로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국군 통수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법적·공식적으로 전쟁지도의 핵심에서 뒤로 물러서 있게 되었다.

요컨대, 전쟁 초기 이 대통령은 전쟁지도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신변의 안전을 위해 대피하기만 했다. 그리고 겨우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맥아더 장군과 주미 대사에 하게 하는 정도였다. 이런 사태는 그가 전쟁지도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했고, 국가적인 전쟁지도 체제가 극도로 빈약한 때문에 발생

-
- 22) 대전에서 대구로 가는 길이 위험하다는 정보 때문에 목포 쪽으로 우회하였다. 이 대통령은 그후 다시 부산으로 가서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 23)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사실상 전쟁을 지도해야 할 국방부장관은 이때 수원역장실에 있었다.
 - 24) 이승만 대통령이 7월 14일자로 쓴 이 서한은 15일자로 전달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국방조약집」(제1집), 629~630 ; 이 공한(公翰)은 한국말로 씌어진 것을 하우스만 대위가 영어로 번역하여 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후 유엔군사령부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하우스만·정일화, 1995.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서울 : 한국문원, 219.

한 현상이었다. 또한 전쟁 발발 이전에 그 상황을 예측·대비하지 못한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군사 부문에서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명·배치하지 못한 인사 무능의 결과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이다.

2.2 38도선 돌파 및 북진에 대한 이승만의 조치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낙동강선까지 후퇴하여 고전을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후 반격작전을 실시하게 되자 이제는 38도선 이북으로의 진격문제가 표면화되었다. 38도선은 당초 미·소간에 설정된 군사점령 분계선에 불과했지만, 양국군의 철수이래 사실상 남·북한간의 정치적 경계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을 돌파하여 북진한다는 사실은 '전쟁 전 현상(status quo ante)'의 회복을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정치적 현상 타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⁵⁾ 실제로 이 문제는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할 때부터 고려된 것이었다. 또, 7월 중순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한군이 38도선으로 다시 격퇴된 후'에 아군이 채택할 정책에 관한 방안을 제출토록 지시한 적이 있었다.²⁶⁾ 하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아무도 전쟁 전 현상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요구 이상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남침한 적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보이면서 장차 북한 지역으로의 진출 여부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측에도 실질적인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38도선 돌파 여부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는 '침략군의 단순한 격퇴와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의 완전

25) 전쟁기념사업회. 1990. 「한국전쟁사」(4), 서울 : 행림출판사, 161.

26) Memo, ExecSecy, NSC to NSC, "Future United States Policy with Respect to North Korea," 17 Jul 50, Foreign Relations, 1950, Korea, 410, 미 합동참모본부 편, 전사편찬위원회 역. 1990. 「한국전쟁」(상), 171에서 재인용.

한 파괴 중에서 어느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였다. 미국 내에서도 북진을 주장하는 매파와 그것을 반대하는 비둘기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²⁷⁾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법적인 근거나 세론(世論)의 동향보다 소련과 중공의 개입 가능성이었다.²⁸⁾

1950년 9월 1일 대통령 측근의 고위 보좌관들은, 미국은 스스로 어떤 단일한 행동노선을 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소련과 중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 너무 불확실하고, 전면 전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미국의 정책을 연합국들이 지지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²⁹⁾

미국과 유엔의 입장이 그렇다고 해도 전란의 당사국인 한국의 국론(國論)은 본래부터 '북진통일'이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분단을 종결하겠다는 결의를 소리 높여 외쳤다.³⁰⁾ 그가 이 기회에 숙원이 성취되기를 바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정지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이 대통령은 "만일 유엔군이 정지하더라도 한국군은 북진한다."고 까지 언명하였다.³¹⁾

그런데 반격하는 부대들이 38도선에 접근했을 때에도 미국과 유엔은 북진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유엔군은 정치적 결정이 있기 전에는 행동하려 하지 않았다.³²⁾ 동부전선에서 제일 먼저 38도선에

27) 미 합참. 위의 책, 172.

28)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육군본부 역. 1986. 「한국전쟁」(5), 158~159.

29) 영국의 입장은 유엔군을 북한으로 진입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며, 한국전쟁을 한국에 국한시켜야 하고 장기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30) 아이젠하워 장군도 북한군이 38도선 후방으로 안전하게 철수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만일 유엔군이 경계선을 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유엔결의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미 합참. 「한국전쟁」(상), 173.

31) 1950년 9월 19일자 연설. 이에 호응하여 조야(朝野)를 불문하고 거국적으로 북진이 실현되도록 힘썼다. 신성모 국방부장관, 임병직 외무부장관이 38도선 돌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국회는 9월 30일에 한국군의 북진을 의결했다.

접근한 한국군 제1군단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 명의 병사도 38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명령이 있을 때까지 38도선 남쪽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미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이 대통령에게는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9월 30일 정일권 총참모장을 불러서 “38도선은 미국이 만든 것이 아닌가! 그것을 북한이 파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존중하겠다는 것인가? 38도선은 벌써 없어진 것이다. 곧 북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받은 정 총장은 고민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의중을 타진해보았지만 그 역시, “정치적 문제이므로 맥아더 장군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한 사람의 병사라도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민하던 정 장군은 군단장 김백일 장군과 숙의한 결과 순수하게 전술적인 필요성, 즉 ‘38도선을 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될 바로 북쪽의 목표물을 제압하기 위해 공격한다’는 것으로 해서 허락을 받아 최초로 38도선을 넘었다. 1950년 10월 1일의 일이었다.³²⁾

이 시기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정지했다면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북진통일을 열망했으며, 유엔과 미국도 곧 그것을 승인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의 의지가 완전히 합치한 것이었다.³⁴⁾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측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이 어떻게 되든’이라고 생각했던데 반해, 미국은 ‘소련과 중공이 개입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⁵⁾ 이 과정에서 미국측이 머뭇거리며 시간을 지체한데 반해,

32)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4), 158.

33) 「국군의 날」은 이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정해졌다. 당시 38도선 돌파·북진에 관한 정황은 정일권, 1996. 『정일권회고록』, 서울 : 고려서적, 293~295 및 佐佐木春隆著, 姜和求譯, 1977. 『한국전비사』(이하, 사사키, 『한국전비사』로 약함)(하). 서울 : 병학사, 501~502 등에 나타나 있다.

34) 사사키, 『한국전비사』(하), 564.

이 대통령은 신속한 결심을 내렸다. 마침내 북진을 하게 되면서도 그 일을 1주일이나 지연시킨 유엔 및 미국 전쟁지도부의 결정은 이후 뼈아픈 패배와 심대한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³⁵⁾ 중공군의 참전 시기와 북한 지역의 겨울 기상을 고려한다면, 이곳에서의 신속한 진격은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것이며, 심지어 한국 전쟁의 승리와도 연결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진통일이 이 대통령의 일관된 소원이었으며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주장이었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판단과 결심은 신속하고도 적절한 것으로서 이 대통령의 전략가적 면모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전쟁 중기 : 휴전협상 전개와 미국과의 갈등

3.1 전황의 새 국면과 미국의 정전 모색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진함으로써 전쟁이 종결되었다면 이 대통령의 전쟁지도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여지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이 본래의 목표를 취소한 채 정전을 모색하게 되면서 문제는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 봄, 미국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최소한의 체면과 안전을 보장할 최저의 조건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방침을 고려하게 되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1951년 4월 5일 마셜(George C.

35) 그 무렵 중공은 한국전 개입 가능성을 표명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중공이 이미 개입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하여 마침내 북진을 결정했던 것이다.

36) 유엔은 10월 7일에 북진을 결의하였고, 유엔군은 10월 9일에 38도선을 넘었다.

Marshall) 국방부장관에게, 한국전쟁에서 당장 어떤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유엔의 최초 목적으로 돌아가 미국이 면목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전을 이루도록 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³⁷⁾ 이로써 확정을 보게 된 대한정책(對韓政策)의 특징은,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었다. “통일·독립·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미국의 궁극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것은 요원한 장래에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정치적 이상일 뿐 결코 군사적 수단을 통하여 단시일 안에 성취될 과제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미국이 추구할 당면과제는 방위와 행정에 적합한 휴전선을 설정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그 이남지역에서 확립하도록 하고, 전 한국으로부터 외국군을 철수시키며, 북한의 재침을 억제·격퇴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군을 증강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그때까지 미국이 견지해온 기본적 방침과 전략개념을 종합한 것으로서, 내용상 새로운 것은 전혀 없었으나 한국전 개입 이후로 제기되어온 전쟁지도상의 기본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하나의 정책안 속에 체계화함으로써 한국사태의 안정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³⁸⁾

미국은 이런 목적을 공산측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정전’이라는 정책은 미국 단독으로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미국은 유엔을 대항하고 있는 입장이었으므로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유엔 각국의 의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전쟁 당사국인 한국의 호응을 얻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측의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적과의 협상을 통한 정전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이 이

37) 육사, 위의 책, 556 ; 사사키, 「한국전비사」(하), 558.

38) 육사, 「한국전쟁사」, 557. 미국가안보회의의 5.16결정은 향후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지도하는 하나의 청사진이 되었다.

대통령의 강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3.2 이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 :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

이 대통령이 미국의 '정전방침'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시기는 1951년 6월 26일이었다. 6월 23일의 말리크(Jacob Malik) 성명과 24일 중공의 휴전회담 찬성 표명이 전세계에 전파된 이틀 뒤의 일이었다. 이날 동경에서 서울로 날아온 리지웨이(Matthew R. Ridgway) 유엔군사령관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제8군사령관과 무초 대사를 대동하고 이 대통령을 방문하여 '워싱턴의 지령에 따라 말리크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전교섭에 응한다'는 뜻을 알려왔다.³⁹⁾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6월 27일 휴전회담 개최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내외에 표명하였다. 이것은 이후 휴전회담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수시로 발표되었던 휴전반대 성명의 제1호였다. 동시에 그는 한반도의 통일을 세계의 여론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곧 제2호 성명을 6월 30일에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우리는 결코 정전에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며, 다만 공산주의자의 모략과 술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태도를 명확히 밝히는 정전조건을 기초로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⁴⁰⁾ 그러나 이 조건이란

39) 미국의 공식 통보 전에도 이 대통령은 휴전 반대의 의사를 나타내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를 분단상태로 내버려둘 어떤 휴전에도 반대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조국을 통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나타냈다. 그는 유엔군과 국군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남북을 통일하고, 한반도에서 공산세력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다. 위의 책, 281.

40) ①한국으로부터 중공군의 완전한 철수 ②북한군의 무장해제 ③제3자의 북한공산주의자 지원방지를 위한 유엔의 개입 ④한국문제에 관한 어떤 국제회의 또는 회합에도 한국대표의 참가 ⑤한국의 주권과 영토의 보존.

사실상 공산군의 전면항복을 요구한 것으로서, 회담을 저지하고 계속적인 북진작전을 호소한 데 있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은 한국전쟁을 제한전쟁화한다는 미국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배치(背馳)되었다.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우호·협조적이었던 이 대통령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는 이때부터 대립적인 갈등관계로 바뀌기 시작했다.

1951년 7월 10일, 드디어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렸고 이 사건은 전 세계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나 미 제8군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으므로 어떤 문제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교섭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⁴¹⁾ 이 대통령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휴전회담장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쌍방의 군사령관을 중계역으로 하는 교섭으로서, 유엔군측에서는 미군 대표가 독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군측 대표로서 백선엽 장군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그의 역할은 지극히 미미했다. 백 장군은 죠이(Turner C. Joy) 유엔군측 수석대표로부터 회담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받았다.⁴²⁾ 이 시기에 유엔군측이 전쟁을 38도선에서 멈추게 될 것을 크게 우려했던 이 대통령은 1951년 7월 하순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을 어떤 선에 따라 분할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온 응답은 휴전에 대한 협조 요청뿐이었다.⁴³⁾

이 대통령과 한국군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계속되어, 1951년 11월 초에는 군사분계선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다음달

41) 사사키. 「한국전비사」, 603.

42) 그래서 그는 한국군 대표라는 책임감과,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회의에 참석한다는 현실에 끼어 몹시 고민하였다. 백선엽. 1999. 「길고 긴 여름날」, 서울 : 지구촌, 216. 그의 후임자인 이형근, 유재홍, 이한림, 최덕신 장군도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하였다.

43) 미 합참. 「한국전쟁」, 196.

중순에는 전쟁포로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는 제네바협약⁴⁴⁾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으나, 일단 토의가 시작된 후로 휴전회담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⁴⁵⁾ 유엔군측이 수용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 중에서 휴전 후에 북한이나 중공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숫자가 예상외로 많았고, 이들에 대한 처리 방침이 공산군측과 유엔군측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공산군측은 이들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송환하자고 주장하였던 반면에, 유엔군측은 자원하는 사람들만 송환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산측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포로, 즉 ‘반공포로’의 강제 송환을 적극 반대했는데, 이 요구 자체는 유엔군측의 정책과 일치했다.⁴⁶⁾ 하지만, 그의 입장이 ‘이 문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휴전회담을 중지해도 좋다’는 것이었던 반면에, 유엔군측의 입장은 ‘휴전회담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그 문제를 관철한다’는 것이었으며, 휴전회담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자세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히 그리고 한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너무 많은 양보를 하면서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데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의 휴전 반대 운동의 핵심이 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워싱턴 당국은 그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미국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과 경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트루먼 대통령⁴⁷⁾ 외에 무쵸 대사, 미 합동참모본부,

44)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모든 포로는 적대행위가 종결되면 즉시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5) 월터 G. 헤어메스, 육군본부 역. 1968.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38.

46) (S)Msg, Pusan 410 to State, 6 Nov 51, DA IN 16175 ; (U)Msg, Pusan 530 to State, 5 Dec 51, DA IN 6516.

리지웨이 장군, 클라크(Mark W. Clark) 장군 등이 동원되었다.⁴⁸⁾ 그러나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무초 대사는 ‘한국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보다 고무하여 인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본국에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⁴⁹⁾

4. 전쟁 종결기 : 휴전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4.1 타협과 절충의 노력

휴전회담이 중단된 채 전선에서 지루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던 1953년 봄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V. Stalin)이 사망하였다. 이를 계기로 휴전협상의 진전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유엔군측은 상병포로(傷病捕虜)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공산군측에 보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들인 공산군측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휴전회담 재개를 제안해 왔다.

곧 쌍방이 합의하여 상병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본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던 때인 4월 24일, 이 대통령은 ‘만약 중공군의 압록강 이남 잔류를 허용하는 조건에서 휴전이 조인된다면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에서 철수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47) 1952년 3월 4일자 서한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을 명예롭고 만족스럽게 종결 지으려는 유엔의 노력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앞으로 한국이 받게 될 지원의 정도는 ‘한국 정부가 보이는 책임감, 국민의 단합을 유지할 능력, 민주적 이상을 향한 노력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48) 리지웨이 장군이 한국 국회에 서한을 보내어 국회의원을 비난한 것도 그 하나의 예였다. 미 합참. 위의 책, 199.

49) Msg, Pusan 637 to State, 4 Jan 52, DA IN, 미 합참. 「한국전쟁」(하), 198에서 재인용.

미국측에 전달하였다. 이 사실은 미국에 충격을 주었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본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4월 27일 서둘러 이 대통령을 방문하였다. 이 시기에 이 대통령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타협과 절충을 모색하는 중계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바로 클라크 장군이었다.⁵⁰⁾ 중계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는,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을 무마·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한국 및 이 대통령의 입장과 처지를 본국에 알려주면서 양측의 절충과 타협을 시도하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였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을 방문한 그는 휴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외국인들은 동시에 한국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⁵¹⁾ 그리고,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 휘하에서 철수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어느 정도 진실인지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는 앞으로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당장에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중대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⁵²⁾

클라크 장군은 이 대통령이 허세를 부리고 있으며, 또한 휴전이 침해받을 경우 군사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조약과 더 많은 경제원조를 획득하며,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가 휴전협상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50) 클라크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에) 부임한 이래로 내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이승만 정부의 자세와 행동이었다'라고 회고한 것을 보면, 그 자신은 이 역할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이 대통령의 조치가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 입장을 위태롭게 하고, 휴전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클라크 저, 김형섭 역. 1981.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서울 : 국제문화출판공사, 435 ; 미 합참. 위의 책, 195.

51) 클라크. 위의 책, 435.

52) 위의 책, 436. 그로부터 16주가 지난 후, 이 대통령은 사실상 이 약속을 어기고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클라크 저. 위의 책, 261~262.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흥정을 하고 있다'고 본국 정부에 보고했다.⁵³⁾

1953년 4월 26일, 6개월 동안 결렬되었던 휴전회담이 다시 열렸다. 휴전회담이 재개되자 이 대통령의 휴전 반대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는 지금까지 고려되어 왔던 조건으로는 휴전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수락해야 한다면 공산군에게 '독자적으로 대항'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것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 한국군작전지휘권의 회수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미국측을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⁵⁴⁾ 그는 또 반공포로를 중립국에 결코 인계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성명으로 발표하였다.⁵⁵⁾

당초 한국측의 휴전 반대 움직임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던 미국측은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휴전반대운동이 너무나 격렬하고, 실제로 한국이 작전지휘권 양도를 철회하여 한국군을 미 제8군사령관 휘하에서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이 휴전을 인정하지 않고 협정을 지키지 않기로 한다면 휴전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정부는 적군보다 오히려 한국측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다.⁵⁶⁾

그렇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회수하거나,

53) (U)Msg, CINCFE CX 62406 to DA for JCS, 13 May 53, DA IN 267117, 미합참. 「한국전쟁(하), 380에서 재인용.

54) 클라크. 위의 책, 365.

55)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4), 284.

56) 클라크 장군에 의하면 휴전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은 공산측에서도 발생하고 유엔측에서도 생겨났지만,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큰 저항의 물결이 더 무서웠다고 한다. 그는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의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그 무서운 저항의 물결이 하늘을 뒤덮을 것만 같았다. 아니, 그것은 마치 시한 폭탄의 뇌관으로 타들어 가는 도화선의 불꽃과 같았다. 그것은 우리가 조인할 어떠한 휴전안도 박살을 내 버리겠다는 위협이었다."라고 하였다. 클라크. 앞의 책, 277, 429.

휴전협상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은 분명했다. 이것이 휴전협상의 진전과 함께 양측이 타협과 절충을 시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때 이 대통령은 휴전의 조건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육군 20개 사단 확장’ 등을 제시하였지만, 미국 정부는 그 제안을 당장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조약은 한국에서 유엔의 휴전을 위한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하여 북한도 자신의 동맹국들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게 되리라는 점. 셋째, 휴전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태도 때문에 미국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조약 체결에 대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따라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유엔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을 고려하였다.⁵⁷⁾

휴전회담의 종결이 임박한 시기에 클라크 장군은 더욱 바빠졌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통령을 방문하는 횟수도 증가되었다. 이 시기인 1953년 5월 12일 이 대통령은 중립국 대표로 선정된 인도(印度)에게 반공포로를 넘겨주는 일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태도를 표명하면서,⁵⁸⁾ 차라리 그들을 석방할 의사도 없지 않다는 말까지 하였다. 깜짝 놀란 클라크 장군은 포로수용소의 한국군 경비병들이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⁵⁹⁾

휴전협상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반공포로의 처리를 두고 쌍방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때 클라크 장군은, 공산군측 요구를 무시하고 휴전성립과 동시에 그들을 즉시 석방하는 방안을 미 합동참모본부

57) John Kotch. 1983. "the Origins of the American Security Commitment to Korea" Child of Conflict :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Bruce Cumings ed., Univ. of Washington Press, 253~254.

58) 송환거부포로들을 인도군(印度軍) 관리 하에 두고 일정기간 동안 설득토록 하자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한국은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는 인도를 사실상 친공(親共)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다.

59) 클라크.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262~265.

에 건의했는데,⁶⁰⁾ 며칠 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통보되었다. 클라크 장군은 매우 기뻐하여 이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렇게 해서 포로문제, 더 나아가서 휴전협상에 관련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4.2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포로문제는 미국측이 휴전협정 최종안을 작성할 때 공산군측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클라크 장군과 브릭스 대사는 1953년 5월 25일 판문점에서 해리슨 대표가 유엔군측의 최종안을 공산군측에게 수교하기 바로 한 시간 전에 이 대통령을 방문하였다

그들이 설명한 요점은, 만일 이 대통령이 휴전협정 수행에 협력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경제·정치적 지원을 보장할 것이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군을 유엔의 작전통제하에 둔다는 '확고한 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일 한국이 단독적으로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⁶¹⁾ 회유 및 협박성 내용이었다. 이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격노하였다.⁶²⁾

60) 클라크는 공산군측이 전쟁 초기에 한국군 포로들을 '석방'하여 인민군에 편입함으로써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 건의는 묵살되었는데, 만약 그때 워싱턴 당국이 질서 있는 방법으로 포로를 석방했다라면, 이후 난처한 지역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크. 위의 책, 437, 441.

61) 클라크. 위의 책, 431~437.

한국측의 휴전회담 반대는 더욱 심해졌다. 국내 신문에 유엔군측의 제안 내용이 게재되고 비난이 빗발쳤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격앙된 감정이 표출되고 미국의 외교·군사 경로를 통해 많은 경고가 쏟아져 들어오자, 미국의 정책수립자들은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요구사항을 너무 조급히 거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⁶³⁾ 워싱턴에서는 5월 29~30일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응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열었다.⁶⁴⁾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이 검토되었다.⁶⁵⁾ 즉, ①‘에버레디계획(Plan Everready)’⁶⁶⁾의 실행 ②유엔군의 철수 ③한국 정부가 휴전협정에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서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이었다. 이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 관리들은 ‘이 대통령을 제거한다’는 제1안을 선호했던 반면에,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부장관과 윌슨(Charles E. Wilson) 국방부장관은 제3안을 지지하였다.⁶⁷⁾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5월 30일 국무·국방장관이 건의한 한·미

-
- 62) 클라크 장군은 이 대통령이 것처럼 격노한 것을 처음 보았다고 했다. 제안 내용도 문제이지만, 유엔군측이 적에게 제시할 제안을 당일 한국 정부에 통고하는 일은 항의를 받을 만한 일로 인정했다. 클라크. 위의 책, 447. Ellis Brigs. 1964. Farewell to Foggy Bottom, David Mckay, 231,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5), 286에서 재인용 ; 미 합참, 앞의 책, 381.
- 63) FRUS 1952~1954, Vol. XV, 1120~1121.
- 64) 합참의 브래들리 의장, 폴린스, 셰퍼드(Lemuel Shepherd), 애들먼, 던컨(Donald B. Duncan), 국무부의 매튜스 차관,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놀팅(Frederick Nolting), 영(Kenneth Young), 존슨(U. Alexis Johnson), 국방부의 내시(Frank Nash) 차관보, 국가안보회의의 글리슨(Everett Gleason), 중앙정보부의 캐벨(Charles P. Cabell) 장군 등이 참석하여 거창한 합동회의가 되었다.
- 65) FRUS 1952~1954, Vol.XV, 1114~1119.
- 66) 미 제8군사령관이었던 테일러 중장이 한국 정부가 유발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여 수립한 계획. 한국군이 유엔군에서 탈퇴할 경우, 이 대통령을 구급하고 한국에 군사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 FRUS 1952~1954, Vol.XV, 965~968.
- 67) 이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만일 에버레디계획을 추진했다면, 미국은 한국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고, 한국에서 큰 위기에 처하였으리라는 이유 때문이다.

상호방위조약 체결안을 재가하였다. 그렇긴 해도 이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응락하고, 휴전 후에도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 이양한 채 안보조약을 추구할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클라크 장군과 브릭스 대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6월 5일 이 대통령을 방문하였다. 이때는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의 5월 25일 제의를 수락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휴전협정 체결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클라크 장군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휴전협정에 호응하면 미국은 상호안보조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협상은 휴전협정 조인과 동시에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⁶⁸⁾

이 대통령은 미국측의 회유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상호방위조약과 휴전반대의 상쇄 여부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휴전은 유화정책이며 공산주의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만 나타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재차 무마책으로 휴전 후의 정치·군사·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친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자기와 한국 국민은 결코 휴전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을 시사했다.

이런 교섭과는 무관하게 판문점에서는 휴전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반공포로 문제는 유엔군측이 양보⁶⁹⁾함으로써 6월 8일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남은 일은 공식 조인뿐이었다. 이 시기 협상의 진전과 미국의 정책을 훤히 꿰뚫어본 이 대통령은 모종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6월 7일 '임시비상경제령'을 내리고 미국 주재 한국 관리들을 소환하였다. 그리고 휴전 조건으로 ①정치회담기간을 60일로 제한 ②한·미 상호방위조약 체

68) 헤어메스.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438~440.

69) 미국은 반공포로 석방요구를 철회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일로서, 그것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또 유엔군 포로에 대한 보복행위를 두려워했던 까닭이다.

결 ③대한민국 육군 규모를 20개 사단으로 확장 및 해·공군의 증장 ④인도 및 공산국가 대표들의 한국 입국 금지 등의 강력한 주장을 폈다.70)

이처럼 사태가 악화되자, 덜레스 미 국무부 장관은 6월 12일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도록 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한국을 떠날 수 없으므로, 덜레스 장관을 한국으로 초청한다고 대답하였고, 덜레스 장관은 극동담당 차관보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파견할 것을 제의하여 쌍방이 합의를 보았다.71)

이 시기인 6월 18일 새벽,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는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이 탈출하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일은 이 대통령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한국군 경비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군은 탈출한 포로들을 수색했으나, 한국 국민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한국 경찰까지 비협조적이었으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음날 이 대통령은 자신이 그 일을 지시했음을 공공연히 밝혔다. 같은 날 클라크 장군은, 한국 정부가 이 일을 주도했으며, 미군 경비병들이 탈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허사였음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였다.72)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세계적인 뉴스 거리가 되었다. 한국 국민은 이 대통령의 결단을 거국적으로 지지했던 반면, 미국 정부는 크게 놀라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산군측은 한국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휴전 협정 준수를 보증할 수 있겠느냐고 유엔군측을 공격하였다.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야기된 반공포로 석방은 사건 자체의 정당성 여부보다 그것이 한·미 관계와 휴전회담에 미칠

70)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5), 291.

71) 헤어메스, 앞의 책, 450.

72) 클라크,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469.

영향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이 휴전회담을 지연시키거나 결렬시키지는 않았다. 한때 격렬하게 항의하던 공산군측도 휴전회담을 거부하지는 못했다. 결국 반공포로의 석방이 휴전회담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며, 한·미간의 관계도 곧 정상화되었다.

이 시점에 이 대통령은 클라크 장군에게,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으며,⁷³⁾ 6월 22일자로 세 가지 휴전조건⁷⁴⁾을 담은 외교각서를 보냈다.⁷⁵⁾ 미국 정부는 이 요구를 당장 수락하지 않았으나, 그의 협조 없이는 휴전회담을 마무리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공포로 석방으로 잠시 연기되었던 이 대통령·로버트슨회담을 추진하였다.⁷⁶⁾ 이에 따라 미국측에서 로버트슨 국무부차관과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이 내한하여 전쟁 발발 3주년인 1953년 6월 25일에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 회담에서 쌍방은 상호방위조약 초안을 교환하였는데, 그 핵심은 한국에 대한 외세의 침략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 회담에서 군사·경제원조에 관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주었다. 이로써 미국은 자신있게 휴전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⁷⁷⁾

73) 위의 책, 282~283.

74) ① 90일 이후까지 정치회담이 중공군 철수에 관한 타협에 실패하면, 다음 60일 이내에 휴전은 무효화 및 폐기, 한국군은 미 해·공군의 지원을 받아 복전
 ② 휴전이 조인되기 전에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③ 미국은 한국의 육·해·공군 증강을 위한 적절한 군사원조와 한국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경제원조를 제공.

75) Rhee and aid-memoire, Kyung Mu Dai, June 22, 1953, Clark Papers, Eisenhower Library, 전쟁기념사업회. 앞의 책, 294에서 재인용.

76) 전쟁기념사업회. 위의 책, 295.

77) 한·미 방위조약의 초안은 휴전 성립 후인 1953년 10월 1일 한국을 방문한 딜레스 장관이 조인하였고, 다음해 미 상원의 비준을 받았다.

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은 군사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침(外侵)에 대한 안보공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냄으로써 국제정치적 이점을 얻게 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받은 것 외에도 정치 지도자로서 또 다른 보너스를 얻었다. 한국 휴전과 관련하여 미국 대통령의 특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이 대통령을 방문한 사실은 아시아에 있어서 그의 권위를 현저히 높여 주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전쟁 또는 휴전 성립에 있어서 그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부상되었다.⁷⁸⁾ 한편 미국은 이 조약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받았다. 또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동시에 한국의 군사적 통일 시도를 억제 한다는 두 가지 기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동안 계속된 타협과 절충의 결과였다.

5. 이 대통령의 전쟁지도에 대한 평가

한국전쟁의 전쟁지도면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은 크게 ‘군사작전 수행면’과 ‘정치·외교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그는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기에 여념이 없었고, 통수권자로서 군사작전 전반에 관해 어떤 방침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유엔군이 참전한 후에는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전쟁지도와는 무관한 위치에 서있게 되었다. 요컨대 군사적인 면에서의 그의 입장과 제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고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땅에서 전개된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쟁지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78) 클라크, 앞의 책, 479.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 대통령을 위시한 한국군 지도부는 ‘북진 통일’을 부르짖으며, 유사시에는 북한군을 궤멸시키고 압록강·두만강까지 쳐들어 갈 것처럼 장담하였다. 소위 ‘북벌론(北伐論)’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는 말이 당시 일반에 회자되었다.⁷⁹⁾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 능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 북벌론과 전쟁준비가 모두 허구였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군사부문에 대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군사면에서 자신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물과 조직적인 기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유능한 인물을 구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활용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며, 전쟁지도 기구도 갖추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큰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사(人事)의 실책 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조직보다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 대통령의 경우에도 동일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그의 과오에 대한 비판은, 인물 기근이라는 해방 이후의 실정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건실한 경제 개발이 더 중요하다’⁸⁰⁾는 미국측 태도가 군사원조를 그들에게 구걸하다시피 한 이 대통령에게 주었을 타격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미 군사고문단의 영향이 지대하던 때에 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79) 김행복. 2002.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군사편찬연구소, 132~145.

80)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Syngman Rhee) to President Truman, August 20, 1949, FRUS, 1949, VII, pp. 1075~76 ; President Truman to President Rhee, September 26, 1949, FRUS, 1949, VII, pp. 1084~85 ; Ordnance Inventory attached to the letter, RG 319, P&O 091 Korea, sec., 1-E, case 16, book 1, nos., 1~4, NA.

시대적인 사정과,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적·실질적인 군사지도 체제가 갖추어 지지 못한 면도 그의 평가에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전쟁지도의 다른 한 면, 즉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군사 부문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전쟁 발발 이후 그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필연적인 조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도발하는 측은 승리의 가능성을 믿고서 —설사 그것이 오만에 의한 것일지라도— 전쟁을 시작한다.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 것은 대한민국보다 우세한 무력으로써 전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해방 직후에는 남북한의 군사력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5년 만에 북한이 남한을 선제 공격할 정도의 힘의 격차가 생긴 것은 미국과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 및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한국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미국의 지원은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이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전쟁 중 그의 조치는 이 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미국의 개입이 전쟁의 흐름을 반전(反轉)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던, 또는 그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던 이 대통령의 역할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중 이 대통령과 미국 정책 당국간의 전쟁지도 방침상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형상 그것은 국가간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이 작용하여 더욱 강한 대립의 모양새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는 전쟁을 적당한 선에서 중단하고 한국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의 정책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

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 정부는 군사적인 승리를 단념하고 정전을 모색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호 협의 없이 회담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다. 한반도에 대한 가변적인 정책과 역사상 어느 전쟁에서도 패배해보지 않은 나라가 갖기 쉬운 오만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쟁지도 방침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 한국 국민들은 그와 태도를 함께 하여 휴전반대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이 대통령의 반발은 이미 휴전으로 방침을 굳힌 미국에게는 심히 불쾌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그들에게는 '동반자'가 아니라 '방해자'로 인식되었으며, 트루먼 대통령의 표현대로 '친구간의 싸움'이 되고 만 것이다.⁸¹⁾

휴전협상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한·미간의 불협화음, 이것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한국은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조기휴전 방침을 추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태도라면 이 대통령의 반발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 전쟁과 관련된 그의 관심은 공산군과의 싸움보다 미국측과의 투쟁에 더 많이 쏠려 있었던 듯하다.

외교나 협상은 어디까지나 타협과 절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끝까지 휴전을 막지는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⁸²⁾ 그러므로 그의 반대는 국내를 향한 제스처와 전후(戰後)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휴전반대운동을 강하게 펼친 것은 절대적인 휴전의 거부가 아니라, 그 반대운동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까닭이었다. 그것

81) 사사키, 「한국전비사」(하), p.597.

82) 군사면에서 볼 때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 노선은 맥아더 원수의 해임과 함께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은 결국 그가 휴전을 지지하고 그 반대급부를 확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눈은 미국의 심장까지 꿰뚫어 보는 깊이가 있었다. 그가 내뿜는 협박이나 묵시적인 위협의 배경에는 정략적 요소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할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가 미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며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은 것은 단지 끝까지 휴전을 반대하는 고집쟁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주의자이며 외교가로서 미국과 유엔의 정책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전쟁에 의한 한국통일의 실현은 불가능하고, 휴전은 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直視)하였을 것이다. 휴전 반대의 위협을 통하여 이 대통령이 얻어낸 이익은 매우 컸다. 그는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와 함께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확약(確約)을 얻어냈으며, 수만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시켰고, 인도와 공산권 인원들의 한국 입국을 봉쇄하였다. 결국 그는 차원 높은 거래에 성공한 셈이다.⁸³⁾

6. 결론

한국전쟁 전 기간을 통하여 이 대통령은 군사작전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극히 미미한 반면에,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적인 의미로서 전쟁지도를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전쟁을 대비하여 국가의 자원과

83) 클라크 장군도 이런 측면을 중시하여 “침략자에 대하여 한사코 싸우도록 국민들을 고무하는 데 있어서 보여준 영도력, 그리고 조국이 공산 폭군의 지배 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으려는 결연한 자세 등에 대하여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 그의 자세는 미국의 엉거주춤한 자세보다 더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클라크.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277, 462, 473.

노력을 조직화하고 효율화하는 일련의 조정·통제의 과정'이라고 할 때, 능력이 부족한 인물들을 국방의 중직에 임명하고, 전쟁 수행을 위한 체계를 구비하지 못한 데다가 전쟁 대비에 소홀하였던 점은 큰 실책이며 총체적으로 그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열세한 국력과 전력(戰力)을 미국의 지원으로 만회하려 하여 대미외교(對美外交)에 주력하였는데, 그것이 전쟁지도 상의 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에서부터 전쟁 발발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에 의해 대세가 결정되는 추세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쨌든 미국을 끌어들이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것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은 그들 자체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능력과 인간관계도 적지 않게 작용했으리라고 생각된다.⁸⁴⁾

더 나아가서,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보다 참전한 미국측을 끝까지 붙들어 두고 나름대로의 뜻을 관철한 면에 있어서 그의 역할은 크고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전쟁 기간 중 한·미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조건을 획득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자신의 독특한 능력과 방법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대신에 필요한 것은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가 얻은 부수적인 소득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결코 미국의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일 것이다. 미국은 그를 독립국가의 원수로서 최대로 예우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체면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컨대 그는 군사지도자이기보다 노련한 정치·외교가로서, 군사면에서 상실한 부분을 외교면에서 보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84) 이 점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는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의혹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담하게 할 말을 하고 끝까지 한국의 입장을 지켰다.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완전히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전적으로 미국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쟁지도의 진전을 억제하고 한국의 입장을 관철한 것은 이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한국 안보의 토대를 굳히는 소득을 얻었다. 이런 면에서, 전쟁 중 이 대통령이 취한 태도와 그의 역할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취할 군사정책 및 외교의 방향·방법에 대해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고지마 노보루 지음, 김민성 옮김. 1981. 「한국전쟁」(상), 서울:종로서적.
-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1993.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방향」.
- 국방군사연구소. 1996. 「한국전쟁」(중).
_____. 1997. 「한국전쟁」(하).
- 국방대학원. 1979. 「戰爭指導時의 諸問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국방조약집」(제1집).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한국전쟁요약」.
- 김광석. 1994. 「용병술어연구」, 서울 : 병학사.
- 金碩源. 1977. 「老兵의 恨」, 서울 : 育法社.
- 김행복. 1999. 「한국전쟁의 전쟁지도」,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_____. 2002.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서울 : 군사편찬연구소.
- 마크 W. 클라크 저. 김형섭 역. 1981.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서울 : 국제문화출판사.
- 매튜 B. 리지웨이 저, 김재관 역. 1981. 「한국전쟁」, 서울 : 정우사.
- 미 합동참모본부 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1990. 「한국전쟁」(상).
_____.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1991. 「한국전쟁」(하).
- 백선엽. 1999. 「길고 긴 여름날」, 서울 : 지구촌.
- 森松俊夫著, 국방대학원譯. 1985. 「戰爭指導史」.
- 온창일. 2001. 「한민족 전쟁사」. 서울 : 집문당.
- 월터 G. 헤어메스, 육군본부 역. 1968.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 육군교육사령부. 1987. 「군사이론연구」.
-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육군본부 역. 1986. 「한국전쟁」(5~9).

- 전쟁기념사업회. 1990. 「한국전쟁사」(4)(5), 서울 : 행림출판사.
- 정일권. 1996. 「정일권회고록」, 서울 : 고려서적.
- 佐佐木春隆著, 姜昶求譯. 1977. 「韓國戰秘史」(상,중,하), 서울 : 병학사.
- 중앙일보사. 1973. 「민족의 증언」, 서울 : 을유문화사.
- 최병갑. 1991. “전쟁지도론”, 「안전보장론」 I, 국방대학원.
- 하우스만 · 정일화. 1995.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서울 : 한국문원.
-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1980. 「전화속의 대사관」, 서울 : 한섬사.
- Dean Acheson. 1969. Present at the Creation.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 Ellis Brigs. 1964. Farewell to Foggy Bottom, David Mckay'
- John Kotch. 1983. "the Origins of the American Security Commitment to Korea" Child of Conflict :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Bruce Cumings ed., Univ. of Washington Press.
- Memo, ExecSecy, NSC to NSC, "Future United States Policy with Respect to North Korea," 17 Jul 50, Foreign Relations, 1950, Korea.
- Msg, Pusan 637 to State, 4 Jan 52, DA IN.
- Rhee and aid-memoire, Kyung Mu Dai, June 22, 1953, Clark Papers, Eisenhower Library.
- (S)Msg, Pusan 410 to State, 6 Nov 51, DA IN 16175.
- (U)Msg, Pusan 530 to State, 5 Dec 51, DA IN 6516.
- (U)Msg, CINCFE CX 62406 to DA for JCS, 13 May 53, DA IN 267117.
- U. S. Department of State, FRUS, 1949, VII.
- _____ , FRUS, 1952~1954, VII.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Conduct of the Korean War

Kim, Hangbok

President Lee, Syngman was ROK supreme commander at the Korean war. But, it is doubt that he executed hi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y the ROK constitution and law.

At the phase of the Korean War conduct, his role may be divided into 'military operation execution one' and 'political-diplomacy one'. He appointed unqualified person to the important position of the national defence, didn't make war execution system, and was not make to meet the war. And, after transferring the ROK force operation commanding authority to the Commander in Chief, UN Command, his role was extremely trivial at the military operation execution phase.

Any way, he intended to recover the inferior national strength and military capacity with USA aid, and concentrated his effort toward diplomacy with USA. At last, he succeeded in making a mutual defence treaty and gained a big result to harden Korea national security after war.

In sum, president Lee was shrewd politician and diplomat than military leader.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he supplemented the lost part of military affairs side with diplomat one.

Keywords : Lee Syngman, Korean war, national defence